

“10분내 제압” 흥준표, 문재인에 밀려

북한 먼저 간다는 질문에 文 “북한 핵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흥 후보는 북한 가지 않을 것인가?”

흥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3일 첫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났지만 10분 내 제압할 수 있다는 공언은 공염불에 그쳤다.

흥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주최하는 '2017 국민의선택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나와 문 후보를 향해 날선 공격을 가했다. 그는 지난 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출 연설에서 “문재인 후보는 (토론을) 붙여주면 10분 내 제압할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었다.

이날 첫 번째 정책검증 토론에서 흥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문 후보는 연일 안정된 태도를 유지했고 오히려 흥 후보가 문 후보의 반박에 밀려 다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흥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 후보의 반박에 밀려 말을 돌리기도 했다.

흥 후보는 문 후보가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사전에 북한에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표문을 열었다. 흥 후보는 “북한에 인권결의안을 물어본 것이 사실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아니다”며 “참석자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참석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 부분은 회고록에 남아 있다”고 일축했다.

흥 후보는 “집권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것을 취소할 것인가”라고 물었지만 “북핵을 완전히 폐기할 수 있다면 우리 흥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자”는 반박에 머뭇거리다 답변 대신 일자로 토론 주제를 옮겼다.

흥 후보는 “문 후보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세급 나눠먹기다. 민간을 확대해야 일자리 만들지 공공일자리를 81만개는 (국가부도 몰린) 그라스로 가지는 것과 같다. 일자리 나누기는 월급 줄이자는 소리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열린 서울방송과 한국기자협회 공동 개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흥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 근로자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란 민간이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소방관, 경찰관, 부사관 다 부족하지 않다. 공공일자리를 지방에도 만들 여지가 많다”고 답했다.

그러자 흥 후보는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문 후보를 비롯한 좌파 정치인이 (강성 노조를) 만들어 해외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내었다.

문 후보는 “선거 때마다 차떼기로 정치자금을 거두고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들로부터 돈 받아 내는 것이 반기업

업이나. 저는 재벌이 일자리를 늘리고 하면 업어준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어 흥 후보가 “노무현 정부 때도 돈 받았다”고 반박하자 “차떼기 수준이 아니다. (흥 후보는) 차떼기 저당 대표도 하지 않았나. 우리 쪽이 반기업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재차 공격했다.

흥 후보는 문 후보가 “왜 제가 주적이냐”고 묻자 “친북좌파라서 (그렇다) 당선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찾아가겠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좌폐니까 정신하겠다. 그러니까 주적이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는 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안보위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그 정권 책임이 아니고 지금 안보위기는 DJ-노무현 10년간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퍼준

것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맞섰다.

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해결 위해 뭐 했느냐”고 묻자 “DJ-노무현 때 북핵 해결한 것 있다. 지금 와서 20년간 외교 못한 것을 자기가 올라가면 하겠다고 어처구니없는 말 하나”고 언성을 높였다.

흥 후보는 청년수당과 보편적 복지 등을 놓고 문 후보와 논쟁을 벌였다. “그렇듯한 말만 하고 진정성은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다. 조선산업이 무너져서 경남경제가 초토화됐다. 그것이 강성노조 때문인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조선 불경기시기에 구조조정 제대로 못해서 아닌가. 안보위기도 10년 통치한 정권이 그 일 정권, 남 탓을 하나. 대통령 될 사람의 자세나, 깊이 반성 바란다”고 지적 받기도 했다. /뉴스

‘미등록 여론조사 트위터 게시’ 박지원에 과태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13일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선관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결과 수치를 인용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양자대결 구도를 언급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삭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

바른정당 “안 유치원 공약, 엄마들 뿔났다”

바른정당은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단설유치원 신설 자체’ 논란과 관련해 “엄마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고 경고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캠프의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후보의 공약에 국공립 확충에 목말라 있는 엄마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1일 대형 단설유치원 신설 제한을 골자로 하는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 후보가 ‘대형 병설유치원 신설 제한’을 공약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지 대변인단장은 “안 후보의 발언에 문제가 제기되자 단설이 병설로 보도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놴”며 “사립유치원 행사에 가서 표를 얻고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국공립유치원 행사에서는 뭐라고 또 말을 바꿔 표를 구걸할 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뉴스

文 “노후 화력 조기폐쇄… 미세먼지 30% 감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노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신설한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까지 감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하겠다”며 “가동 30년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한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미세먼지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

미세먼지 발생 저감 대책에는 경유차 감축도 들어간다. 문 후보는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로 가야 한다”며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겠다”고 했다.

공장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대책도 세운다. 미세먼지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을 강화하고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를 충청권까지 확대한다. 15% 정도에 불과한 점검율을 끌어올리는 등 단속 점검도 강화한다.

또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점검하는 역할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가 맡는다. 앞으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또 다른 축인 중국 등 국외 정책을 마련한다.

현재 환경부 장관급에서 다루지는 한·중간 미세먼지 협력 논의는 정상외교 주요외교로 격상해 논의한다. /뉴스

영입전쟁에 국민의당, 자기당 전직 의원까지

안철수 지지 104명 중 50명은 당원 “50명 최근 입당, 54명 곧 입당 예정”

대선 정국에서 각 당의 영입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전직 지방의원들이 자당 후보를 공개지지한다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전북도내 전직 광역·시·군의원 104명은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를 공개지지하며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날 안 후보를 공개지지한 104명 중 50명은 국민의당 당원 신분이었다.

결국 당원이 자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던 웃지 못할 모양새가 돼버렸다.

이날 대표발언에 나선 김완자 전 의원은 “5대절벽과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앞에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책임자는 바로 안철수 후보”라며 지지 선언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상속자의 나라에서 자수성가의 나라로 바꾸겠다

는 안 후보의 약속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변되는 이 시대의 사회 격차를 해소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오픈캐비닛을 만들어 대당평의 인사 방침을 한 안 후보만이 소외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의 이같은 해프닝은 최대 경쟁자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다보니 전북지역에서 ‘세

불리기’를 과시하려는 조급증 때문이라는 정치권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50명은 최근 입당한 국민의당 당원이며 나머지 54명도 곧 입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떼기에 이어 품수 영입전쟁에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아무리 세불리기에 치중한다고 해도 이런 모습은 도민에게 정치의 혐오감만 더 생기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재용 기자